



3면

문 대통령 "트럼프도 진단키트 요청 정부 차원 요청국 많아"

전주매일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음 3월 3일) 제2503호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약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발 긴급지원금도 전국화 예고

행정명령대상시설 지원 정 총리, 중대본서 주목 송 지사, 시군 실정맞게 확대·지원 검토 주문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놓은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이 정부의 주목을 받는 등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농철을 맞아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가 제안한 외국인 인력확보 방안 역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전북발 코로나19 극복 방안'이 빛을 발하고 있다.

2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회의)에서 전북도가 지난 23일 발표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이 전국 수범사례로 논의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정세균 총리는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책을 추진하는 등 여러 면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북도의 이번 정책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보다 확대해 정부가 운영 제한 행정명령을 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클럽·클럽·유흥주점)과 함께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도 추가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도는 운영제한 행정명령이 실효를 거두려면 대상시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보고 전국 처음으로 도내 1만3,064개 대상시설에 도 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70만원씩을 전수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중대본회의에 이어 진행된 도내 시군단체장 영상회의에서 송하진 지사는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시군 실정에 맞게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행정명령대상시설



이주 긴 비례대표 투표용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5일 도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기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50개의 정당 중 40개의 정당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모의 개표 시연회를 실시했다.

추가 확대와 긴급지원금 지원 여부는 시군별 특성을 감안해 단체장 재량으로 결정해 달라"며 "시군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긴급지원금 지급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은 소득보전용이 아닌 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조치"라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안전과 코로나19 청정 전북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농민을 달래기 위한 전북도의 '외국인 인력확보 및 수급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도 조만간 정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돼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며 "현재 방문비자(F-1)로 입국해 취업활동이 제한된 외국인에게 일시적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고용허가제 비정규취업자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농업 분야 전환취업 허가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농촌 일손 문제에 대해 각 부처가 적극 검토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으며 법무부, 농식품부, 고용부 등 관련 부처가 긍정적 검토에 나섰다.

한편, 전북도는 25일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벌여 영업제한 조치 위반 영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중지 등 강력한 행정명령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행정명령 집행 예고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제한과 관련해 도 자체 재난관리기금 100억원을 활용해 해당 시설에 긴급지원금 70만원씩 지급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운영제한을 강제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행정명령대상시설은 도내 종교시설 3,876개소, 요양시설 300개소, 학원 5,270개소, 유흥시설 1,019개소, 노래연습장 1,028개소, PC방 845개소, 실내체

육시설 892개소, 콜센터, 영화관 등 총 1만3,280곳이다. /김진성 기자

26~27일 4.15 총선 후보자등록

공식 선거운동 4월 2일부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된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와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등)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의 개정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은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4월 2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아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후보자등록 사항은 중앙선관위 선거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 선거일까지 공개하며, 4월 5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딸~ 밥은 잘 챙겨 먹어?"
"먹었지~ 엄마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까운 이들도 멀리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마음만큼은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괜찮다'며 자주 격려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코로나19_우리가 이깁니다



도, 집단감염위험시설 긴급지원 신청기한 하루 연장

26일까지... 시설별 70만원

전북도는 25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에 누리되지 않도록 신청기한을 하루 연장해 2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도는 당초 운영제한으로 인한 해당 시설의 피해를 덜어주고 코로나19 중

식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속한 자금 집행을 계획했지만 신청 누락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시설이 없도록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6개 집단감염 위험시설 도내 1만3064곳은 26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시군 관공서로 신청하면 행정

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70만원을 신청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재난관리기금(긴급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이며, 현장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는 도청과 시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별 신청 장소에 비치된 서류를 활용하면 된다. 지원 대상시설 여부와 신청장소, 방법은 시군별 긴급지원금 처리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전북신보, 소상공인 융자지원 '맞손'

업체당 최고 4000만원까지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신용보증재단과 손을 맞잡았다.

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25일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전주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는 전북신보에 1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출연하고, 전북신보의 경우 특별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총 100억원의 재원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 제도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로써 시는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

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영운영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전제무를 보증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용등급 3등급 이하(3~7등급)인 전주시의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담보 없이 업체당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대출금리의 1%를 초과하는 이자부터 최대 5%까지 이자 차액에 대해 5년간 지원함으로써 실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1% 수준에 불과해 소상공인의 자금운용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상환방식도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일정금액으로 상환하는 원금

균등 분할상환방식뿐만 아니라 초기에 원금상환이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을 위해 거치상환 방식으로도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이 상환에 대한 압박감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특별보증은 자금 소진시까지 운영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가능하다. 기타 상담 및 서류접수는 전북신용보증재단(063-290-3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내수부진과 최근 발생한 코로나19까지 여러 경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특별보증 지원이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